

I.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

□ A&R.1

-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
 -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'11년 후반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, '12년에는 3.5%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
- 다만 고령화, 대북관계 등 중장기 위험요인도 잠재
 - 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은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완화 가능
 - 녹색성장은 향후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을 주도할 전망
 - 고령화, 불평등 심화, 상대적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의 선별적(carefully-targeted) 확대가 필요
 - 무엇보다 교육 제도, 노동시장, 서비스 산업 개혁을 통해 불평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

□ A&R.2: 한국경제 성장과 거시경제정책

- 재정책대, 수출증가로 지난 3년간 평균 5% 성장률을 유지
 - 중국 수요 확대, 원화 절하(엔화 대비 43% 절하) 등으로 수출이 호조
 - 수출호조가 기업·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

□ A&R.3 : '11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물가상승

- 수출주도의 경제회복이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함
 - '08년 말 이후 제조업 생산이 32%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*은 9% 증가에 그치고, 건설업 생산은 급감
 - 제조업-서비스업간 양극화는 대-중소기업간 격차 확대, 사회불평등 심화, 고용증가세 둔화를 야기
 - 원화가치 하락도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하여 양극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, 물가 상승*, 실질임금 하락도 초래
- * '11년 3/4분기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범위(3±1%)를 초과한 4.3%를 기록
-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한국 수출도 정체되고 성장률도 잠재수준인 4%를 하회

□ A&R 4~5: 많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, 성장세는 회복될 전망

- 한국은 현재의 일시적 경기둔화를 극복하여 '12년 3.5에서 '13년 4.25%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
-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된다면, 세계 무역 성장률은 '11.4분기 3.5%(연율) → '12년말 7%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
 - 이 경우 한국 수출은 원화의 상대적 약세, 두자릿수에 달하는 중국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될 것
 - 빠른 수출 증가는 투자 촉진, 고용성장, 임금상승을 통한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
 - 최근의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물가상승률은 3%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

- 그러나, 한국 경제는 중대한 **국내외 위협요인**에 직면
 - **가계부채가 가계 소득의 132%('10년)까지 증가**
 - **이자율 상승이 예상보다 심각한 민간소비 감소로** 이어지게 될 가능성
 - **유로존의 부정적인 위협요인들이 현실화되는 경우** OECD 국가들이 경제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
 - 특히 한국의 경우 **수출이 GDP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** **글로벌 경기둔화에 더욱 취약**

□ **A&R 6~7: 긴축재정을 통한 2013년 재정 균형 달성**

- 한국은 GDP의 6%에 해당하는 **대규모 경기 부양책**을 통해 '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
 - 다만, 소득세·법인세 감면을 동반한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**통합재정수지*(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제외) 악화**
 - * '07년 GDP의 0.7% 흑자에서 '09년 4.1% 적자로 전환
- **'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'10년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전환**
 - '10년 재정적자는 GDP의 1.1%로 빠르게 감소
 - 지출 증가는 '12~'13년 명목 GDP 증가율의 3%p 이하로 제한될 전망
 - 재정지출 억제에 힘입어 한국은 순채권국임
 - 한국정부의 **양호한 재정여건**을 감안할 때, 향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**경기부양 정책 운용의 여력**이 있음

- 다만, **중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 및 대북협력 증가의 잠재적 비용을 고려하여** 정부 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

□ **A&R 8~9: '11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**

-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이 확고해진 '10년 하반기 들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
 -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'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인 3%를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.
 - * '11년 하반기 CPI는 3.4%(연율) 상승. 다만, '12년 초반에는 경기 둔화로 물가상승 하락
-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'11.7월 이후 기준금리를 3.25%에서 동결
- **현재 금융상황은 '08-'09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5년을 통틀어 가장 완화**
 - 이는 마이너스 실질단기금리와 낮은 수준의 실질실효환율에 기인
- 일단 우리경제가 **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난 후에는** 물가상승률을 3%로 낮추기 위해 **금리정상화를 지속**해야 함

□ A&R.10: 환율 정책과 자본 흐름

- 한국은 수출지향적이고 자본시장개방도가 높은 비기축통화 국가로서 대외충격에 특히 민감하여 '98년, '08년 위기시 자본 유출과 급격한 환율 절하를 경험
 - '08년 후반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 은행들이 아시아 특히,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서 은행 대출 차환(rollover)이 중단
 - 그 결과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
 - ('08, 10)한미통화스왑이 위기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

□ A&R.11: 환율 정책과 자본 흐름

- 한국은 위기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추가 축적중
 - '11년말 중반 단기외채의 2배가 넘는 3,000억불을 초과
- 그러나, 외환보유액은 주로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에 투자되어 높은 기회비용을 유발
 - 또한, 국가 자산을 대량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위험 또한 상당
- 다만, 통화스왑 체결은 효과적인 대안
 - * '11년 한국은 중국, 일본과도 통화스왑을 확대
 - 통화스왑과 더불어,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

□ A&R.12: 환율 정책과 자본 흐름

- 한국의 외환보유액 축적은 원화 약세에 기여
 - * '07-'11년말 사이 원화가치는 실질실효기준으로 26% 하락, IMF는 '11년 중반 원화가 약 10% 과소평가된 것으로 평가
 - 원화 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한국경제에 기여
 - 또한, 한국은 세계 8위 수출국으로서 원화절상은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
- 원화환율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등('11년)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음

II. 경제성장 촉진 정책

□ A&R 13

-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(지난 10년간 실질 GDP 연간 4% 성장)
 - 미국과의 일인당 소득 격차가 '91년 62% → '10년 36%로 감소
 -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'95년 7% → '10년 4%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, 소득 격차간 증가 지속
 - 한국이 선진국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하락(5→3%),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감소(2%→1%)
- * 생산가능인구(working-age population)의 성장률 감소(1.4→0.7%)

□ A&R 14

- 그러나 잠재성장률의 하락(생산성 향상 둔화)으로 선진국과의 수렴과정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더욱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
 -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4대 연소국이나, '50년에는 2대 노령국이 될 것으로 보임
 - * 여성 1인당 1.2명의 아이를 출산하여 세계 최저 출산률 국가 중 하나
 - 총 부양비율은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.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최고치에 이르고, '50년에 1/4이상 감소할 전망
- 노동력 감소로 KDI는 2030년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%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

□ A&R 15

-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한국의 성장잠재력 유지는 정책 대응 범위에 의해 결정
 - 저탄소 녹색성장, 교육 부문 개선,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
 - 여성·청년·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,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수단 필요
 -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사회지출 증가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지도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

□ A&R.16: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

- 한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'97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중 5번째로 높음
- 한국 녹색성장정책의 목표중 하나는 “에너지 자립 확보”임. '09년 기준 주요 에너지 공급의 86%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
 - 이러한 변화는 신산업과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,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
- '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등을 포함한 녹색성장정책 추진은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

가. A&R.17: 녹색성장 5개년 계획

□ A&R.17: 5개년 계획 일반

- '09~'13년 5개년 계획은 107조원의 예산('09년 GDP의 10%)이 소요되는 600개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음
-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극복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녹색 혁신 부문임을 감안하여, 공공부문 R&D가 총 R&D의 11%를 차지
 - 민간 기업은 4,732개의 R&D 프로젝트 중 거의 2/3에 포함('09년)되어 있으나 지출액 비중은 8%에 그침
- 녹색 연구 분야에 금융투자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

□ A&R.18

- 정부는 녹색분야 투자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추진중
 - 5개년 계획의 상반기 동안 녹색산업에 대한 은행의 대부액은 은행 기업대출의 2%에 달하며, 이중 국책은행이 3/4 정도를 차지(이는 국책기관 보증을 받고 있음)
 - '09~'11년 동안 벤처캐피탈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는 2배로 증가(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50% 수준)
 - 공적자금은 83개 벤처기업에 투자됨

- 몇몇 소수의 회사들에게 선택적으로 공적자금을 몰아줄 경우 낮은 기술수준에 안주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소수 기업 특혜 지원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

- 어떤 기업이 진정한 녹색기업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이 필수적
- 더 많은 자금을 시장기반 시스템과 상업(금융)기관을 통해 조달하여 국영은행과 공적자금의 역할을 줄여야 함

□ A&R.19: 저탄소 경제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중요

- 정부는 '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로 대체할 예정
 - * 공급의무량 비중목표: 2012년 2% → 2022년 10%
- 그러나, 이 경우 저효율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제 등을 초래하므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기술발전 정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

나. A&R.20~26: 시장기구 도입

□ A&R.20

- 녹색혁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의 조합을 통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시장기구를 도입하는 것
 - 그러한 가격정책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
- '90~'07년 사이 한국의 배출량은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, 이는 전세계 배출량 증가율 27%를 훨씬 상회

- 2010년에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 BAU 대비 30% 감축(05년 대비 4% 감축)하는 목표를 수립
 - 최근 연구에 따르면,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직접규제시 비용의 40% 수준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□ A&R.21

- 탄소가격 도입은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반드시 필요
-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천톤 이상인 471개 업체 (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%)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안을 '11년 마련
 - 배출권의 5% 이하는 경매에 의하며, 그 나머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할당될 예정
 -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 예정
- 감축기술과 감축잠재력 측정치에 기초한 한국의 배출권 할당 계획은 현재기업들에게 우발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신규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
 - 그러므로 배출권거래제는 경매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간 계획을 포함할 필요
- 배출권거래제가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배출자(기업)의 배출량 조절에 최적인 반면, 세금부과는 가정, 소기업 등 작고 분산된 오염원들에게 더 적합한 측면

- 다만, 두 제도간 중첩되는 부분과 복잡하게 상호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함으로써 총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

□ A&R.22

- 기업 부문은 계획된 ETS(planned ETS)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적인 상태
 - 큰 영향을 받는 일부 산업에 대한 과도기적인 지원이 적절할 수 있음
 - 다만, 현재의 생산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지원한다면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음

□ A&R.23

- 한국의 낮은 전기가격은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음
 - 낮은 전기요금에 따라 한국의 '09년 1인당 전기소비는 OECD 평균에 비해 1.7배 높음
 - 또한 부문별 가격차이로 시장 왜곡을 초래
- ⇒ 따라서, 전기가격은 각 부문에서의 생산원가를 완전하게 반영할 필요

□ A&R.24: 성장 도모를 위한 노동시장 대책

-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급감을 의미
 - 노동인구 참여율이 각 연령그룹별로 현재의 수준에 머무를 경우, 노동력은 '22년 최고치(2,720만명)에 달한 후 '50년까지 21%가량이 감소하여 2,150만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
 - 노인 1인당 노동력은 '10년 4.5명 → '50년 1.2명으로 낮아져,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재정부담은 노동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

□ A&R.25 : 성장 도모를 위한 노동시장 대책

- 인구학적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**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**임
 - '10년, 25-54세 여성의 참여율은 62%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번째로 낮은 수치
 - '50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각 연령 그룹별로 현재 남성의 참여율 수준으로 수렴된다면, 노동력은 대략 2,560만명 정도가 될 것임
 - * 참여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보다 19% 상승된 수치
-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방법 필요
 -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감소시켜야 함
 - 높은 비정규직 비중 완화, 성과급제도 · 출산휴가기간 · 유연근무제 확대 등

□ A&R.26 : 성장 도모를 위한 노동시장 대책

-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**최저 수준**
 - 대학교육과 함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이 **불일치**하기 때문
- **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** 또한 제고해야 함
 - 55세 이후 주요 경력직에서 은퇴하는 경향이 있는 **장년층 노동인구를 효율적으로 활용**하는 것이 중요
 - *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개인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1/3수준으로, 50세 이하의 경우 13%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
 - 정년퇴직제로 인해 기업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이 고용자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경우 장년층 직원을 해고
 - 다른 OECD국가들처럼 **정년퇴직제를 폐지**하고 **퇴직금을 새롭게 도입된 기업 연금 체제로 대체할 필요**

□ A&R. 27~31 : 성장친화적 재원조달

- 한국의 국민부담률(25.1%, '10)은 OECD평균(33.2%)에 비해 낮으며, 특히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수준이 낮음
 - * '10년 GDP대비 부담비중(%): (소득세) 한국 3.6, OECD 8.7
(사회보장부담금) 한국 5.8, OECD 9.2
- 노동에 대한 조세격차(Tax wedge)는 20%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→ 한국 경제에서 노동투입이 높은 이유
 - 노동에 대한 낮은 세부담은 기업가 정신, 교육의지, 해외 직접투자를 유입시킬 것임

- 한국은 '09년, '10년 소득세율을 2%p인하(최고구간 제외) 하였으며, 법인세율(지방세 포함)도 '00년 30.8%→'10년 24.2%로 인하

○ **재원마련을 위해 성장친화적 조세개혁이 필요**

* '00-'07년간 공공사회지출이 연간 14%증가하여 OECD중 가장 빠름

- **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, 과세기반을 확대**
- 면세 범위를 줄이고,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여 **부가가치세 세원을 확대**
- 녹색성장을 위해 **환경세를 강화**하고, 부동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**보유세 강화도 검토 필요**

□ **A&R. 32 : 사회보험료 징수**

- 고령화 대비 재원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**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개선할 필요**
- 그간 사회보험료 징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**비정규직·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**
- '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**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함**으로써 소득과약이 더 투명해지고 징수체계도 개선될 것

□ **A&R.33 : 직업교육 개선을 통한 고학력화 문제 해결**

-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중 4/5정도가 대학에 진학*하지만,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절반 정도만 정규직에 취업('07년)

*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

- '09-'10년도 30세 미만 대학졸업생 가운데 22%는 미취업 교육 훈련생(NEET)으로 OECD 평균치의 3배에 달함

- 반면, 중소기업(SME)은 인력부족 문제에 직면

-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과잉교육문제를 해결하기란 극히 어려움

* '10년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, 자녀가 최소 4년제 대학을 졸업 하길 기대하는 학부모 비중은 전체 중 93%에 달함

- 상위권 대학 진입을 향한 목표에서 **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**에 대한 보상(임금결정시 성과에 대한 비중 확대)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

□ **A&R.34 : 직업교육 개선을 통한 고학력화 문제 해결**

- 고학력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**직업 교육(중등 및 대학 교육 수준에서) 개선 필요**

- 중등 교육의 경우, 직업 교육학교의 학생 비율이 '95년에는 42%였으나 '10년에 24%로 감소

- **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개선**하기 위해 정부는 28개의 **마이스터고를 도입·육성 중**

· 해당 학교 수를 계획대로 늘려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

- 고등교육의 경우 전문대학(college)이 대학교(university)로부터 학생들을 빼앗기는 상황

· 대학교는 미용학과 같은 순수 직업교육 분야의 학위지급을 삼가고, 전문대학은 **국가자격과 커리큘럼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국가자격시험을 준비시켜** 역할을 개선

· 국가자격제도를 **간소화**하고,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도움이 될 것

□ **A&R.35 : 대학 교육의 질 개선**

- 인구학적 및 경쟁 압력에 부합하기 위해 **대학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**이 완전히 활용되어야 함
 - 대학 교육의 급격한 양적 확장은 품질 저하로 이어짐(국제적으로 한국 대학의 랭킹은 낮은 수준)
 - 한국은 이제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, 성과중심으로 전환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
 -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몇가지 방안을 추진(서울대학교 법인화, '14년까지 90%의 대학교육기관이 최근 도입된 인가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)

□ **A&R.36: 대학 교육의 질 개선**

- **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**를 통한 교육기관 간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
- 외국학생의 수가 적고, 운영 중인 외국 고등교육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**국제화의 정도는 제한적**임
 - **외국 학생과 교육기관 유치**를 위한 개혁은 한국 고등 교육 질을 향상시킬 것

□ **A&R.37: 대학 교육의 질 개선**

- 한국 소재 대학교는 R&D 자금조달(funding)과 R&D 수행에서 각각 1%와 11%를 차지(OECD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)
 - R&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계 연구자, 정부, 대학교의 상호교류 확대 필요
 - 대학교에 대한 정부 R&D 자금지원 역시 현재의 13%수준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

□ **A&R.38: 영유아 교육·보육 확대**

- 한국은 영유아 보육·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해왔음(보육료를 소득 하위 70%까지 확대 지원)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'08년 기준 취학전 교육에 대한 지출 규모는 GDP대비 0.2%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(이중 공적부문 지출은 46%)

□ **A&R.39: 영유아 교육·보육 확대**

- 한국은 보육비용,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, 민간보육시설 과잉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
 - ① (최우선 과제) '16년까지 5세아 무상보육 목표 달성
 - ② '12년 5세아 누리과정의 효과적 시행, 향후 0~4세아 대상 단계적 확대 등 교육 콘텐츠 개선
 - *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통합할 필요
 - ③ 공공 유치원 확대 필요

□ **A&R.40: 영유아 교육·보육 확대**

- 현재 국공립 및 사립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불균형.
 - 아이들이 국공립 및 사립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ECEC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 및 규제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결
 - 과도한 국공립 수요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립기관(전체 등록 학생 중 약90%를 돌봄)의 품질 개선을 통해 해결

- 사립 기관의 품질은 평가 인증률 제고 및 기준강화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

- 정부는 2011년도 시범적으로 특정 기관에 대해 보육료 자율화(50%)를 시행

- 만약 성공할 경우, 모든 기관에 대한 보육료 상한선이 폐지될 것이며, 높아진 보육료는 재정지원확대를 통해 상쇄

□ A&R.41: 서비스산업(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완화 필요)

- 제조업은 한국경제발전을 주도해왔으나, 서비스업 비중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(GDP대비 57%)

- * 30개 대기업 중 서비스기업은 4개

-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58%로 ,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준('08년 기준)

- 주요 선진국의 소득수준으로 수렴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두 번째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

- 지난 25년간 고소득 국가들 GDP성장의 85%가 서비스 산업에서 기인

- 서비스 산업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의 대학졸업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

□ A&R.42: 서비스산업(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완화 필요)

- 한국 경제구조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발전전략의 결과로, 서비스 산업에는 자원 투입이 부족

- 서비스 산업의 R&D투자는 총 R&D지출의 7% 수준(G7국가 평균의 25%)

- 또한, 정부는 R&D지출의 3%만을 서비스 부문에 할당

-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

- * '12년 정부는 healthcare포함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 대한 R&D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

□ A&R.43 :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

- 정부의 '09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5개 분야*의 전략이 포함

- * 의료, 교육, 녹색금융, 콘텐츠·SW, 컨벤션·관광

- 그러나 특정 산업에 한정된 정책보다는 **서비스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정책**이 더욱 효율적이며 위험이 적음

- * 기획재정부도 “과도하게 강한 규제가 투자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”고 언급 (MOSE, '09)

- 국내 진입장벽 제거, 규제개혁 가속화, 경쟁정책 개선,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(FDI)에 대한 장벽 제거를 포함한 **경쟁강화** 조치가 핵심

- 한국 정부는 진입장벽제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

- * '11년 "신규사업비용" 부문의 순위가 126등에서 60등으로 상승 (World Bank, '10년)

- *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이상 (OECD, '12년)

□ A&R.44: 서비스산업(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완화 필요)

-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임
 - 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입침투율, 외국인 근로자 비중,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정도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와의 통합 정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
- 한국의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노력은 국내로 유입되는 **외국인직접투자(FDI) 증가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한국의 FDI 유입 잔액은 2010년 GDP의 13%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음
 - 특히, 서비스 분야의 FDI 비중은 GDP의 6% 수준(OECD 평균 37%)
- FDI 유입을 늘리기 위해 **주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 제한** 등 FDI 관련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
 - 또한 국가 간 M&A를 장려하고 조세·규제 정책의 투명성 제고,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

□ A&R.45: 서비스산업(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완화 필요)

- 정부는 '97, '08년 위기시 신·기보 보증 확대등의 **중소기업 지원 실시**
 - 이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**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**으로 작용
-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**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회수**하고, **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할 필요

Ⅲ. 사회통합 정책

□ A&R.46: 소득 불균형 심화 및 상대적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

- **소득불평등은 등록금 문제,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함께 주요 정치 이슈**로 등장
-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
 - 지니계수,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추세
 - * 상대적 빈곤율은 '08년 15%로 OECD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
 - 소득5분위 배율(5.7)로 OECD 평균(5.4)보다 나쁜 수준
- 경제 성장이 소득불균형 및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,
 -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고성장률 달성만으로는 소득불균형 심화문제와 높은 빈곤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

□ A&R.47: 소득 불균형 심화 및 상대적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

- 한국은 **불평등 심화**를 야기하는 몇몇 문제에 직면
 -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지출(social spending)이 가난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, 한국의 경우 **사회지출 규모가 예외적으로 낮은 편**
 - 노동시장 이중성,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, 높은 사고육비용 등도 사회 불평등을 심화

□ A&R. 48: 공공사회지출

-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
 - '07년 한국은 GDP의 7.6% 수준(OECD 평균 약 19%)
 - 가족 의존형 부양 형태, 낮은 실업률,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분포 등에 기인

□ A&R. 49: EITC

- 제한적인 사회보장과 실업보호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
 - 자녀수당, 양육수당 등 가족혜택은 GDP의 0.5%에 불과,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(OECD평균 2.2%)
 -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인구의 3%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상대적 빈곤선 이하인구(15%)에 크게 부족
 - 또한, 정부의 전체 현금보조액의 1/4만이 소득하위 20%에게 지급되어, 저소득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측면
- ⇒ 이에 따라 한국의 조세/이전지출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
-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적이며, 또 다른 주요한 수단은 EITC*
 - EITC는 특히 한국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

□ A&R. 50-53 : 연금제도

- '06년 한국의 노령연금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의 25% 수준인 GDP대비 1.7%로, 이는 연금제도 미성숙에 기인
 - 그 결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
-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%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, 금액이 작아 노인빈곤해결에 한계
 - 대상은 축소하고, 혜택은 확대할 필요
- 연금제도가 성숙하면 노인빈곤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될 전망이다, 소득대체율이 40%로 OECD 평균 58%에 비해 낮은 편
 - 사회보장분담금 상향조정하고,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(60→65세) 일정을 앞당길 필요
- 아울러 연금이 성숙하더라도 실제 받는 연금급여는 더 작을 수 있어 연금의 노인빈곤문제 해결은 제한적
 - '07년 전체 근로자의 57.5%만이 연금에 가입한 상태이며, 일부는 최소납부기간(10년)을 미충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
 - 자영업자·가족근로자가 축소신고한 소득에 기반하여 연금급여가 산정
- ⇒ 노인빈곤율을 전체인구 빈곤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유도 및 자영업자·비정규직 소득과약을 제고 필요
-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에 의해 보완될 필요
 -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, 개인퇴직계좌(IRA)를 권장할 필요

□ A&R. 54-59 :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

- '08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2/3로 낮은 수준이며,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장년층 인구비율,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정책(수가제도) 등에 기인
 - 그러나 전체 의료비 지출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41%로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높음
 - 높은 개인의료비 부담에 의해 질병에 대한 비용 부담이 불평등해지고 빈곤이 심화될 수 있음
- 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질병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미흡*
 - * 국민평균가처분 소득 절반 이하를 버는 계층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의료비가 가처분소득의 1/3까지 가능
 -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부담상한선을 낮출 필요
- 고령화*,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공공보건 의료지출이 급증할 전망
 - *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65세 이하 성인의 4배 수준
 - '90년 GDP대비 1.5%였던 의료비가 '08년 3.5%까지 급증
 - 한국의 특수한 의료문화는 추가적 지출증가요인으로 작용
 - * 인구대비 침대시설 수가 높은 수준이며, 입원기간(16.7일)이 OECD 국가 평균(8.7일)의 두배('09년)
 - ** 약품 소비량이 많고, 1인당 병원방문횟수는 3.7회('78)→13회('09)로 급증
- 비용 상승에 대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필요
 - 가격 체계 개선, 복제약 가격 인하 허용 등을 통해 의약품 지출 감소를 유도할 필요

-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일수 감소를 위해 '02년에 도입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확대하고, 의무화할 필요
- 담배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출 필요
- 불필요한 입원일수 단축은 장기요양제도 구축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
 - 병원은 치료 및 의료서비스에 집중하고, 요양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편이 효율적
- '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으로 노년층 요양비율이 증가('10년 4.4%)하였으나, 여전히 OECD평균(13%)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
 - 시설 1개당 노인이 62명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장기요양시설도 현재 부족
 -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민간 참여 확대 도모 가능
 - 타국 사례에서 보듯 요양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, 기관보다는 재택요양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

□ A&R.60: 이중성 철폐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줄이기

- 설문조사에 의하면, 기업에서는 노동비용을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
 - '10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근로자 임金的 53%에 지나지 않음(생산성 차이에 비해 더 큰 격차)
- 국내 상근직 근로자의 1/4이 넘는 사람들이 평균소득의 2β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킴(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)

-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사회보장제도 범위가 작기 때문에 더욱 심화됨
 - '10년, 국민연금제도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보장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0% 수준
 - 고용보험의 제한된 보장 범위는 실업급여 시스템의 효과를 저하 → '10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1/3에 불과
- ⇒ 즉, 고위험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며 사회보장혜택은 덜 받는 노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화는 심각한 불평등문제를 야기

□ A&R.61: 이중성 철폐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줄이기

- 정규직 근로자 해고 비용은 강도 높은 고용 보장, 대기업의 강력한 노조에서 비롯됨
 - 노동법은 “경영상의 이유”로 인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으나, 상당히 제약적임

- 이는 기업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“모든 수단”을 동원하고 해고안에 대해 적어도 50일 이전에 근로자와 논의를 거쳐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부수조항에 기인
- 이에 따라 기업은(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) 조기 퇴직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, 단기계약근로자 고용을 확대
- *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고용보장을 실시하는 국가일수록 임시직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(OECD 연구결과)

□ A&R.62 이중성 철폐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줄이기

- 이중화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제공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센티브를 줄여야 할 필요
 - 최우선과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의 강도를 완화하여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
 - 2번째 우선과제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높여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비용 격차를 줄여야 함
 -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취업기회를 높일 필요

□ A&R.63 이중성 철폐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줄이기

- 노동시장 이중성은 또한 생산성 증가를 저해
 - 비정규직중 가장 큰 비중은 임시직이며, 이는 근로자의 이직을 증가시켜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기회를 축소

□ A&R.64 : 서비스 부문 소득 높이기

-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낮은 소득으로 이어짐
- 상기에 언급된 정책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감소하면 소득불균형을 줄일 수 있음
 - 또한, 기업에 종사하던 장년층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의 자영업으로 전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(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)
 - 정년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기업은 고생산성 직종의 근로자를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을 것

□ A&R.65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 개선

- 유치원 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, 사교육(학원)에 대한 높은 의존을, 비싼 대학 등록금과 같은 교육의 여러 가지 면모들로 인해 불평등 문제가 제기
 - 유아 교육은 빈곤가정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출발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됨
 - 그러나, 한국은 적은 공공지출, 사교육기관의 높은 비중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짐
- 즉, 저임금 가정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몰리게 되는 반면, 고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등록하는 경향

- 15세 학생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유아교육 참여의 영향력 측면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

□ A&R.66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 개선

- 15세 학생의 방과 후 교육 참여율은 OECD평균치의 2배를 상회
 - 특히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을 위해 학원에서 오랜시간을 보냄
 -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학력주위(credentialism)로 인한 것(능력보다는 학교간판을 중시)
 - 그러나, 지나친 학원 의존률은 가정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
 - * '10년 학생 1인당 과외비용의 경우 평균 가계소득의 10.7%에 도달
 - 사교육비용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비례하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, 높은 재정부담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
 - 학원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- ① 학원과 공공교육과 경쟁하는 동시에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
 - ② 둘째, 학생들의 교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공공교육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움
 - ③ 셋째, 고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완전한 발달을 저해함

□ A&R.67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 개선

- 학원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 교육 품질 개선, 중등교육의 다양성 확대, 대입에서 수능의 역할 감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음
- 이러한 개혁을 지속하는 동시에 직업교육을 개선할 필요
 - 더불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낮은 비용의 방과 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음

□ A&R.68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 개선

- 한국의 대학교육비용에 대한 공공분야의 비중은 '08년 22%로 이는 OECD 평균 (69%)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
 -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대학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
- 또한, 정부 장학금·보조금(교육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4.6%), 학자금대출(5.4%)은 OECD 평균치인 11.4%와 8.8%에 한참 못 미침
 - 결국 학생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이 그들이 진학하게 될 대학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

□ A&R.69.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 개선

- 반값 등록금 슬로건은 넓은 지지도를 얻었으나, 반값 등록금으로 인한 단점이 상당함
 - ① 보편화된 학비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입하게 되면 과잉교육 문제와 상기에 언급된 기술 불일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됨

② 등록금 반값은 돈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

- 낮은 품질의 대학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

③ 모든 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금은 저소득층 학생만을 위한 지원보다 효율성·평등성 문제에 있어서 덜 효율적

④ 너무 비쌌(연간 GDP의 0.6%)

- 타국의 경험을 볼때 대학 등록금 보조가 일단 확립이 되면 여기서 탈피하기 어려움
 - 오랫동안 지속될 금융적 결과를 감안하여 조심성이 요구되며,
 -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졸업후 소득을 감안한 대출금 상환과 함께 학자금대출의 이용도를 확대할 필요
- * 학자금 대출은 '10년에 도입되었지만, 소득조건으로 인해 대학교 학생의 6%만이 혜택을 받음

A&R. 70. 결론

-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임금 불균형, 높은 상대적 빈곤 문제가 함께 등장
 - 이는 경제 성장만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을 의미하며, 급속한 노령화 현상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
- 상기 언급된 다양한 정책으로 좀 더 평등하고 결집된 사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필요.
 - 사회지출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제공
 - 정부의 직접적인 사회 서비스제공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참여를 도모
 - 공공투자 축소 및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가장 잘 부합 할 수 있음
 - 사회지출증가는 국민의 담세력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

□ Box 1. 거시경제정책 권고

- '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것
 - 고령화,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
-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
 - 재정 정책은 '09년과 같이 '고용 확대'에 집중할 필요
- 인플레이션을 3% 목표로 낮추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現 경기회복의 일시적 둔화와 불확실성 시기를 극복한 이후에 금리정상화를 지속할 것
-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, 외환보유액 축적의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축적을 방지(avoid the further accumulation)
-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혜택을 유지

□ Box2. 경제성장촉진정책 권고

- 탄소가격부과(배출권거래제, 소규모 배출자에 대한 탄소세) 등 시장기제를 통해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할 필요
- 전기소비를 감축하기 위해 생산원가에 맞게 전기가격 설정
-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할 필요
 -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을 확충, 육아휴직 사용 촉진, 가족 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,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

- 고령자 정년퇴직 제도 폐지 등을 검토하여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필요
- 소득세·법인세의 세율을 낮게 유지하되, 과세자 비율을 확대
 - 면세범위 축소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확대하고, 환경세·보유세 강화 등도 검토 필요
- 5세아 무상교육 실시 등 영유아 교육·보육 투자를 확대, 어린이집 인가 의무화,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도 추진
- 직업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젊은 근로자의 노동참여율을 제한하는 고학력화 문제, mismatch 문제를 해결
- 정부와 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혁신에 대한 기여를 향상
- 중소기업 지원 축소, 진입장벽 제거·규제완화 등 경쟁 강화,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(FDI)에 대한 장벽제거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추진

□ Box 3. 사회통합정책 권고
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, 근로장려세제(EITC) 확대
-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①기초노령연금 혜택확대 및 대상축소, ②국민연금제도 개선, ③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
-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개인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낮추면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상승을 억제시키므로 보건의료의 형평성 제고

- 민간 중심의 장기요양시설 확충할 필요
- 정규직-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성을 철폐할 필요
 -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,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, 임금격차 축소,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등을 추진
- 서비스부문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, 고령자의 자영업자 전환을 늦출 필요
- 유아교육 개선, 사교육 축소, 학자금대출 확대 등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형평성 제고

- '11년말 북한 지도자(김정일) 사망으로 불확실성 증대
- 한반도 긴장에도 '04년 건설된 개성공단 생산은 증가
 - 개성공단은 '11.9월 현재 123개 기업이 근로자 48천명을 고용하여 '10년에 3.23억불을 생산
 - 남북교역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비중은 '08년 44%에서 '10년 70%로 증가

□ Annex A1. 남북경제협력

- 북한의 '09년, '10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.9%, 0.5%
 - '10년 기후 악화에 따른 농업생산 하락, '09년 11월 화폐 개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 억제된 것에 기인
 - 북한의 '10년 총교역액은 '09년 대비 20% 증가한 61억불
 - 중국·남한과의 교역이 북한 총 교역액 중 90% 차지
 -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고, '10년에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(47%)이 대남수출액(41%)을 증가
 - 남북교역·경협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에 따라 중단
 - 남한은 대북 제재조치(교역중단, 대북투자금지, 방북불허), 인도적 지원 중단 등으로 대응
- * 남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예하고,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을 동결하고,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파트너 모색